

해명자료

문의 :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(☎750-2630)
통신시장조사과 황상하 사무관(☎750-2637)

매일경제 보도(12.14) 관련 방통위 입장

‘12.12.14.(금) 매일경제의 “이동통신 빅3에 과징금·영업정지”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 요지

-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하게 뿌려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.
- 방통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.

□ 방송통신위원회 입장

- ‘12.9.13일부터 실시한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제재 내용과 수준에 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
-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·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따라서 “방통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.”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